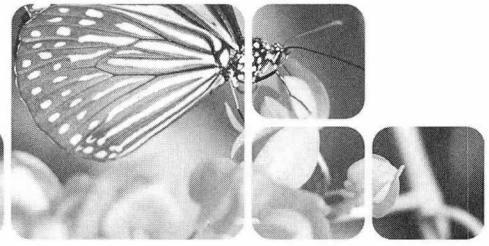


# 환경 소식



## 산자부, 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산업자원부는 올해부터 향후 10년간의 해외자원개발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에는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를 대폭 상향조정해 오는 2013년 20%, 2016년 28%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금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종전의 제2차 기본계획(2004년 수립)에서 제시됐던 2013년 18%를 2%p 상회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는 현재 확보한 탐사, 개발, 생산광구의 생산계획과 각 광구별 탐사성공률을 감안한 생산량과 신규로 확보할 광구의 생산량을 추산해 산정한 것.

참여정부 기간중 대거 확보한 탐사광구가 개발·생산단계에 진입하는 2011년부터 획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주개발역량이 크게 강화됐다. 광물자원의 경우에도 산업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률을 2016년까지 대폭 확대 추진한다. 현재 자주개발률이 미미한 동의 경우, 2016년까지 35% 수준으로 제고한다. 현재 자주개발률이 비교적 높은 유연탄, 아연의 경우 2016년까지 각각 50% 및 40% 수준으로 지속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주개발률이 전무한 우라늄 및 니켈의 경우 우즈벡 잔투아르

우라늄 광산 개발 등을 통해 2016년까지 각각 15% 및 29%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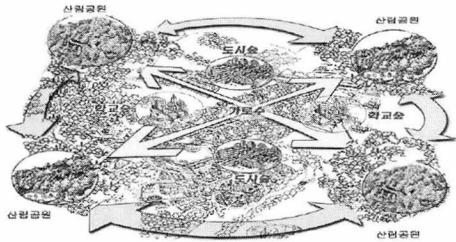
자주개발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고, 사업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원개발펀드를 활성화(연평균 5000억원 규모로 출시)해 풍부한 시중자금을 자원개발에 투자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금융을 확충해 광진공, 석유공사 등 공기업 및 해외자원개발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우, 국내에서는 공공성을 중시하더라도 해외진출시에는 수익성을 최우선시해 선진국의 메이저회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 광진공,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 지원기관을 활용해 기술, 인력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사업역량도 강화하게 된다.

## 전국의 도시공원 '확 바뀐다'

수목보다는 잔디 위주로 조성돼 다소 단조로운 느낌을 주던 전국의 도시공원이 '도시숲' 형태로 탈바꿈 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산림청(청장 서승진)이 발표한 '도시림 기본계획'에 따르



면 도시지역의 공원, 녹지, 유원지 등에 존재하는 도시림의 조성·관리에 '도시림 관리지표'를 마련, 지역특성과 주변 환경에 따라 그 기능을 구분하게 된다. 특히 기능별 관리, 녹색 네트워크 구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한 체계적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도시림 관리지표'는 도시림을 기능에 따라 공원형, 경관형, 방풍·방음형, 생산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도시림에 대한 숲가꾸기, 나무심기 등과 같은 관리를 기능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는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다.

또 도시 외곽의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도시자연공원 등과 같은 비생활권 도시림과의 연계방안과 도시림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 조치 등에 대한 기준도 담고 있어 이를 통해 도시녹지 공간의 생태적 건강성, 경관성, 주민 이용성 등을 한층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시림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은  $6.56m^2$ 로 세계 보건기구(WHO) 권고기준( $9m^2/1인$ )의 2/3에 불과한데, 오는 2017년까지  $10m^2/1인$ 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전국의 도시림을 양적, 질적 기준으로 그 실태를 조사해 도시림의 품질을 나타내는 '도시림 지속성지수'를 개발, 향후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도시림 조성·관리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별 도시림 총량을 산정하고 도시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경우 전용된 양만큼 대체 도시림을 조성하도록 하는 '녹색 총량제'를 도입해 각 도시별 도시림의 양과 품질을 일정 목표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시림의 '녹색의 질' 향상을 위해 방치된 도시림에 토양개량, 시비, 숲가꾸기 등을 확대해 도시림 건강성 기반을 증진하게 된다. 도시 내·외곽에 방치된 산림은 지역 주민의 수요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교육·체험형, 보건·휴양형 등 다양한 유형의 산림공원으로 조성, 도시지역 녹색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역사, 전설, 구전 등을 통해 전해내려 오는 유서 깊은 지역별 마을숲에 대해서는 그 유형별 특징을 살려 복원·관리할 계획이다.

### 환경부, 실내 라돈 관리 본격 추진

환경부는 지난 14일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보건복지부장관 주재)에서 '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오는 2012년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라돈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3차례 전문가회의와 과학기술부(방사선방호), 건설교통부(건축자재·건축물)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라돈(222Rn)은 암석, 토양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238U)이 방사성붕괴를 통해 생성되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국제암연구센터

(IARC)가 건강위험성 측면에서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고위험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미국·스웨덴 등 외국에서는 90년대부터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농도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보수 등 저감조치를 하는 등 라돈노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에서 토양, 지하수, 건축물 등의 라돈농도를 부분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일부 주택과 지하철역 등에서 권고기준(4피코큐리)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17개 다중이용시설군과 학교(지하고실)에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권고기준을 주택 등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의 예와 같이 라돈노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권고기준 초과 건물 등에 대해 개·보수 등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라돈은 발견만 하면 환기, 건물 차폐시공 등을 통해 노출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주변의 라돈 노출실태를 쉽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비의 개발·보급 등 관리 인프라가 우선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마련된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돼 추진된다. 1단계인 2009년까지는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 기초 실태조사 및 라돈지도 작성 등 라돈 관리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게 된다. 2단계인 2010년부터는 노출경로별 건강영향조사,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건물·지하수·토양·건축자재 등 고노출경로와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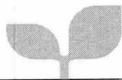
환경부는 금번 대책의 실행을 위해 라돈실태 조사에 98억원, 건강영향조사에 22억원 등 2012년까지 총 15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어린이가 먹어서는 안 될 5가지 식품첨가물

(사)환경정의는 타르색소, 안식향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 MSG를 '어린이가 먹지 말아야 할 식품첨가물 5'로 선정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가공식품에서 이들 첨가물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 제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해당 기업에 첨가물 교체 요구를 하는 등 푸드폴리스(Food Police)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환경정의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안전성에 대해 대사회적으로 크게 의구심이 제기되었던 첨가물들이 2006년 9월 식품완전표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변화된 상황을 모니터링하였다.

안전성에 대해 의심이 가는 첨가물들은 많지만 최근 몇 년간 환경단체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몇몇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거의 노력을 보여준 식품첨가물 즉, 타르색소, 안식향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 MSG에 주목하였다. 이들 성분은 이미 몇몇 기업들이 해당 첨가물을 식품 속에서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제거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번 모니터링 결과, 시민들의 우려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제품들이 해당 성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첫 번째 모니터링으로 여름철 즐겨먹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한 제품 43종 79개 품목의 첨가물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43종 중 11종 17개 품목의 제품이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하였고, 10종 21개 품목의 제품이 황색4호, 5호, 청색 1호, 적색 40호 등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안식향산과 타르색소를 모두 사용한 제품은 6종 12개 품목이었으며, MSG(L-글루타민산나트륨)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2종 2개 품목이 있다.

### 자동차배출가스평균배출량 관리제 도입

국내 최초로 자동차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Fleet Average System)는 자동차제작사가 다양한 배출등급의 차를 생산, 판매한 평균배출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제도다. 제작사의 평균배출량이 기준이하일 경우, 감축실적 만큼 Credit을 부여해 향후 기준 초과시 활용토록 인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 자동차 배출가스 촉매제 관리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 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은 연료별·차종별로 획일적인 규제방식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의 제작·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차종의 생산중단으로 인한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초래 및 지역경제 위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컸고,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추가 감축한 실적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incentive)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캘리포니아주(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평균

배출량관리제도(FAS)를 도입하게 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작사는 회사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차량생산을 계획할 수 있게 돼 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대기오염총량 감축을 유도할 수 있어, 산업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형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배출가스 촉매제(유레아)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됐다.

향후 강화되는 대형경유차 배출허용기준(EURO-4, 5)을 충족하기 위해 SCR(요소수용액(유레아))을 통한 화학반응으로 NOx를 저감시키는 기술을 적용할 경우, 유레아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요구됐다. 유레아를 사용하지 않거나 저급한 유레아를 사용할 경우, NOX 저감효율이 떨어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배출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

이밖에 운행차에 대한 종합검사제가 도입된다. 그간 하나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안전도 검사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검사인 정밀검사를 전교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시행하면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여 왔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현행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일원화해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기·정밀검사의 통지,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처분등 검사의 모든 사항이 일원화돼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법률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공포후 6월 경과후에 시행된다. 평균배출량과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